

- 건설산업 차원에서 ESG의 다양한 요소 중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대응하여 구체적인 경영 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에 나갈 필요가 있음.
 - 다만, 건설산업 ESG 경영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선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건설산업에 대하여 중요하게 고려하는 ESG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 또한, 정부와 건설기업이 건설산업 내 ESG 경영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ESG 경영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건설기업은 ESG의 영역 중 어떠한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지 파악한 후 해당 분야의 구성 요인 중 가장 취약하고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선정해 이를 토대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관련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평가 및 데이터를 축적해야 함.
 - 정부 차원에서는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ESG 평가지표에 대한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또한, 건설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건설전문교육기관 등을 활용하여 건설업에서 필요로 하는 ESG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을 고려해야 함.
- ◎ 건설산업 내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건설 관련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즉, 제도적 유인책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건설업도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산업의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됨.
- 국토교통부는 금번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에서 건설산업 ESG 경영 유도 및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ESG 경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마련을 계획 중임.⁴⁾
 - 또한, 공공조달 혁신을 위해 ESG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임. 즉, ESG의 반영이 국제적 흐름이나, 공공조달은 환경·사회 요소의 일부만 고려하여 체계적 반영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중소기업 대부분이 조달기업인 특성을 감안하여 ESG 기반조성, 시범 적용(ESG 관련 포상·우수 중소기업에 공공조달 입찰시 가점 부여 등 검토)을 거쳐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예정임.⁵⁾
 - 기획재정부에서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 경제구축을 위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 종합해 보면, ESG 경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면 개별 건설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산업 차원에서 ESG 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ESG 평가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 작업, ESG 분야별 모범 사례(best practice) 발굴, 교육 지원 등 정책 대응 마련이 필요함.

최은정 연구위원(kciel21@cerik.re.kr)

4) 국토교통부(2022.11.),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 공청회” 자료 참조.

5) 관계부처합동(2022.12.), “비상경제장관회의 공공조달 혁신방안” 자료 참조.

ESG 소식

정부 관계부처 합동,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COP27(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폐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 마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정, 2023.1.1. 시행
산자부,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발표
한국투자공사(KIC) UN 책임투자원칙(UN PRI) 가입
2022년 탄소배출량 1% 이상 증가, 사상 최고치 기록 전망
대기업 87%가 협력사 ESG 평가, 매년 증가 추세

정부 관계부처 합동,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 ◎ 2022년 12월 2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과제에 포함되었던 ESG 인프라의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 ◎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ESG 공시제도 정비)** 글로벌 기준·국내실정 등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되, 기업의 ESG 공시 부담 완화 병행
 - ② **(중소·중견기업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수출·협력기업에는 공급망 실사 대비 맞춤형 지원 제공
 - ③ **(ESG 투자활성화)** 민간의 ESG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ESG 채권 가이드라인 등을 개선, ESG 평가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 마련
 - ④ **(ESG 정보·인력자원체계 구축)** ESG 정보 이용자의 활용도·편의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ESG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 ESG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 ⑤ **(공공부문 ESG 경영 및 투자 선도)** 공공기관·연기금 등 공공부문의 ESG 경영·투자 선도를 통해 민간의 ESG 자발적 확산 유도
 - ⑥ **(추진체계)** 정부는 민간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민관합동 컨트론타워인 ESG 협의회 설치

COP27(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폐막

- ◎ COP(Conference Of the Parties)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가입국이 모여 기후 위기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로,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199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열리고 있음.
- ◎ 2022년은 COP27(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2022년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이집트 샤름엘셰이크(Sharm el-Sheikh)에서 열렸음.
- ◎ COP27의 가장 큰 성과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겪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마련이 타결되었다는 점임.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기후변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보상해줘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보상을 촉구하는 개발도상국의 입장과 재정적 부담 발생을 우려하는 선진국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합의에 난항을 겪었으나 결국 기금 마련이 합의됨.
- ◎ 다만 구체적인 재정 마련 및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다음 COP까지 관련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 또한 COP27에서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논의되었던 '지구 온도 상승폭 1.5도 제한' 목표를 유지하는 합의가 있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논의가 이루어졌다. 온실가스 저감장치가 미비한 석탄화력 발전의 단계적 축소 기조도 유지되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년 11월 21일 제5차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이하 탄소중립 기술특위)를 개최하고, 수소공급,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무탄소전력공급, 친환경자동차 등 총 4개 분야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을 심의·의결함.
- ◎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이행안은 국가가 당면한 명확한 임무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단계별로 기술 획득이 성공할 경우에 후속 개발을 지원하여 현장까지 적용하는 각본(시나리오 방식)으로 설계되어, 실제 탄소중립 기술의 현장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이번에는 얼마 전 발표된 ‘수소 기술 미래 전략’(22.11.9., 수소경제위원회)과 연계하여 수소와 연관성이 높은 △ 수소 공급, △ 무탄소 전력공급, △ 친환경차 분야를 비롯하여, 산업·에너지 분야의 탄소 감축 핵심수단이 되는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을 포함, 총 4개 분야에 대한 이행안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분야	내용
수소공급	- 수소 생산·공급 목표 '30년 연간 194만 톤, '50년 연간 2,790만 톤으로 확대 -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국내 수소 생산 역량 단계적 확대('25년 1~2MW급 → '28년 10MW급 → '28년 이후 100MW급 이상) '30년까지 수소 액화 기술 국산화('23년 0.5톤/일 → '30년 5톤/일 → '30년 이후 수십 톤/일), 암모니아-수소 추출설비, 액체수소 인수기지 및 수소 전용 배관망 등 핵심기술 국산화 - 최근 4년간('20~'23년) 약 3,345억 원 규모 연구개발 예산 투자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연간 1,030만 톤, '50년 연간 최대 8,520만 톤 - 이산화탄소 국내 포집 역량 단계적 확대('25년 연 7만 톤 → '30년 연 400만 톤 → '30년 이후 연 1,000만 톤),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장소 운영('30년 연 400만 톤 → '50년 연 1,500만 톤) 계획 - 탄소 전환·활용 기술 고도화('25년 연 7,000톤 → '30년 연 4만 톤) - 최근 4년간('20~'23년) 약 3,637억 원 규모 연구개발 예산 투자
무탄소 전력공급	'30년까지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전체 발전의 3.6% 수준으로 확대, '50년에는 수소를 활용한 무탄소 가스터빈을 전체의 21.5%까지 확대 - 석탄발전에서 석탄 일부를 암모니아로 대체하는 비율 단계적 확대('27년 20% → '30년 50%)하도록 기술 고도화, 액화천연가스 발전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수소로 대체(수소혼소, 수소전소)하는 기술 확보 - 수소연료전지 '28년까지 복합발전 혹은 열병합 발전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친환경 자동차	'30년까지 총 450만 대 보급 목표 '30년까지 리튬-황, 리튬금속 전지 등 차세대 전지 차량 실증 완료, '26년까지 배터리 화재 억제 기술 개발 병행 400kW급 초급속 충전 핵심 기술(전력변환장치 등) '25년까지 국산화 계획 - 수소차 '2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수준의 수명을 가지는 내구성 높은 연료전지 기술 확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정, 2023.1.1. 시행

- ◎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규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taxonomy)가 2023년 1월 1일 시행됨. 개정된 녹색분류체계에는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실증’과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이 각각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에 포함되었음.
- ◎ 다만, 환경부가 9월 공개한 초안과 비교하면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목적이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일 경우로 제한함.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과 관련해선 초안과 비교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조속한 확보를 담보하는 법률의 제정’이 인정기준으로 추가됨.
- ◎ 또한, 개정 녹색분류체계에는 ‘태풍·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방지 또는 기후 예측시설·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이 녹색부문 활동으로 새로 규정됐으며,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 대상 대출 등 금융서비스도 녹색경제활동에 해당한다고 명시됨.
- ◎ 녹색분류체계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하는 품목과 이 품목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활동이 포괄적으로 녹색부문 활동에 포함됨. 6대 목표는 △ 온실가스 감축, △ 기후변화 적응,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순환경제로 전환, △ 오염 방지·관리, △ 생물다양성 보전 등임.
- ◎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정부가 정리한 목록에 해당함. 친환경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의 투자가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산자부,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2022년 12월 7일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및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업종별 기업 연합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실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 공급망 실사 대응용 K-ESG 가이드라인은 실제 대기업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 활용하는 진단·실사 지표를 분석하여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공급망 실사에 대응 가능하도록 진단항목을 개발하였음.

〈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주요 진단항목 〉

정보공시(P)	환경(E)
▶ ESG 정보공시 방식, 정보공시 주기, 정보공시 검증 등	▶ 환경경영 추진체계, 온실가스 배출량, 제품 내 유해물질 관리 등
사회(S)	지배구조(G)
▶ 정규직 비율, 인권정책 수립, 근무시간 준수, 안전보건 인허가 취득 등	▶ 비윤리 행위 예방 조치, 공익제보자 보호, 정보공개 투명성 등

-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에는 공급망실사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500개 사에 대해 공급망 ESG 리스크를 진단·개선하는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임.

한국투자공사(KIC) UN 책임투자원칙(UN PRI) 가입

- ◎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 투자역량 및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UN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책임투자원칙)에 국내 공적 투자자 중에서는 국민연금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입하였음.
- ◎ KIC는 “스튜어드십 원칙 제정, 투자자산 전반에 걸친 ESG 통합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모델 수립 등 책임투자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면서 “세계 최대 책임투자 협의체 가입을 통해 글로벌 선도 책임투자기관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밝힘.
- ◎ PRI는 지난 2006년 UN 주도로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결성한 세계 최대 책임투자 협의체로서 현재 5,000개 이상의 기관이 가입했으며, 가입기관 총 운용자산 규모가 약 121조 달러(약 17경 4,000조 원)에 이르고 있음.
- ◎ PRI는 ESG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 개최를 통한 투자자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확대, 협력적 주주 참여 활동 기회, 책임투자 실무를 위한 가이드 등을 제공하고 있음.

2022년 탄소배출량 1% 이상 증가, 사상 최고치 기록 전망

- ◎ 2022년 석유·석탄·가스 등 화석연료에서 방출되는 탄소(CO₂)의 양이 전년보다 1% 증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세계탄소 프로젝트 연구팀’은 2022년 11월 11일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가 열리고 있는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이런 내용의 이산화탄소 방출량 연구결과를 발표함.
- ◎ 2022년 전 세계에서 화석연료 연소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최대 배출국 중국과 유럽연합(EU)에서 각각 전년보다 0.9%와 0.8% 감소한 반면, 인도, 미국, 나머지 지역에서 각각 6%, 1.5%, 1.7% 늘어 전체적으로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음.
- ◎ 이 같은 결과는 탄소 배출 증가의 많은 부분이 자동차와 항공 여행 등 운송 부문에서 발생했고, 이는 세계 각국이 팬데믹 기간 내렸던 여행 제한 조치를 해제했기 때문으로 진단함.
- ◎ 또한, 석유와 석탄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각각 2021년보다 2%와 1% 증가하는 반면 천연가스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는 0.2%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음. 화석 연료 종류별로는 석탄에 의한 이산화탄소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석유와 천연가스가 각각 33%와 22%를 차지함.
- ◎ 2022년의 이산화탄소 증가 속도는 10~15년 전보다 빠르지는 않지만, 파리기후협약이 정한 목표인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을 만큼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진단하였음.

대기업 87%가 협력사 ESG 평가, 매년 증가 추세

- ◎ 2023.1.10, '중소기업중앙회'가 시가총액·매출액 상위 주요 대기업 30곳과 협력사 10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 ESG 관리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협력사 ESG 평가기준을 적용한 곳은 26곳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조사결과에 따르면, ESG 평가기준을 확대하는 대기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 2019년 17곳, △ 2020년 20곳, △ 2021년 26곳으로 늘어남. 세부 평가에서는 환경·안전·인권·보건·윤리경영 등 다양한 분야를 평가하고 있었으며,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협력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는 곳은 14개사 (46.7%)에 이름.
- ◎ 평가결과의 활용에 있어선 70%가 구매정책에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해당 협력업체에 대해 인센티브(유인책) 제공은 13곳, 페널티를 가하는 곳은 16곳으로 나타나, 인센티브보다는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 많았음.
- ◎ 또한, 협력업체 108개사 중 58.3%가 '평가수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은 '없다'는 의견이 42.6%를 차지해, 중소 협력업체의 ESG 역량에 대한 평가 치중 대비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 대기업의 지원 항목도 실질적인 협력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설, 설비, 자금 지원은 4.6%에 불과하였음. 대부분 교육(39.8%), 컨설팅(25.0%) 지원을 하고 있었음.
- ◎ 이와 함께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의 지원사항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우리 회사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44.4%)', '실질적으로 도움 안 됨(27.8%)', '상환조건 등 지원요건 부담(16.7%)'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의 지원 필요 항목으로는 'ESG 관련 시설·설비개선(20.4%)', 'ESG 관련 자금(19.4%)', '교육(10.2%)'이 언급되었음.